



2023  
특별호

# 지식공유 브리프

20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및 전망



2023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특

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KSP 포커스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자유화 로드맵 수립



### CID 연구포커스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 행사

2023년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



2023년 EIPP 세미나: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한 한-EU 혁신적 파트너십



2023년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KDI 세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식공유와 국제개발협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23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정욱  
awaker2@kdi.re.kr

기후재난, 감염병, 지역 분쟁, 에너지 위기, 공급망 단절 등 다양한 글로벌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사회 구조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긴급하고 시급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번 브리프는 '20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호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호의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톡은 2023년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및 2024년 전망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김은주 한성대학교 교수는 올 한해 국제개발협력의 특징과 평가를 집필하였고,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과 관련된 내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은 각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을 주제로 합니다. 부산외대 아시안연구원의 이요한 교수는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집필하였고, 한국외대 김은경 교수는 아프리카 지역, 계명대 정상희 교수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을 살펴봅니다.

이번 브리프를 통해 제시된 국제개발협력의 나아갈 방향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번 특별호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및 각 분야별 전문가와 지식을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며,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법&정책 트랙 교수 김은주  
eunjukim@hansung.ac.kr

2023년은 코로나19 감염병이 공식적으로 종식되면서 전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온 첫해다. 지난 몇 년간 비상 상황 속에 집행되던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연구들도 정상화되었고, 과거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향후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현상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논의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교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된 뒤 대외정책과 ODA 연계가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새 정부 국정과제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지역 전략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ODA 분야에서는 중점협력국 중 13개국에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원조규모를 늘리고,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 등 협력국 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이 접점을 이루는 분야를 집중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실 미국, 일본, EU 등 많은 나라가 이미 수년 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적 관심을 보이며 대외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두드러지게 드러난 특징 중 하나는 '소다자협력' 방식의 등장이다. 기존의 양자협력, 다자협력,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이외

에도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like-minded countries) 간에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역시 2023년 대외정책 전반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으며, 개발협력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미 개발협력 MOU를 개정하고 전략적 중요지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례로 7월에는 KOICA와 USAID가 필리핀에서 해양쓰레기 분야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10월에는 한-미-일 3국이 '개발적·인도적 지원 정책대화'를 최초로 개최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지역 전략 내에서 개발협력 정책을 공조하기로 하였으며, 전쟁·분쟁,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한-미-일 3국이 대외정책과 ODA를 연계하여 공조하는 일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3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교집합 내에서 상호 간에 윈-윈할 지점을 잘 찾아내어 실질적 협력 성과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자연재난과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해 한국의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 분야도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4월에는 수단 내전, 10월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분



쟁·갈등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인도적 지원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2023년 2월 발생한 터키 지진, 9월 모로코 지진 등 전 세계에서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터키에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였고, 총 152명이 2차에 걸쳐 활동하였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현장을 자체 방문하여 식량, 의료 등을 긴급 지원하였다. ‘형제의 나라, 터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아 터키 지진피해를 돕고자 많은 국민이 현금과 현물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분야가 조금 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때마침 올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법안을 보면 해외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해 자연재해뿐 아니라 감염병 확산·분쟁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은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재난복구와 조기회복, 만성재난 지원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H)-개발협력(D)-평화(P)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긴급구호를 넘어서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관련 법안이 실제 개정되고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4년에 인도적 지원 분야 ODA 예산이 약 3배 증액될 전망이므로 관련 분야의 제도화와 집행 시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화(loc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2022년 12월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에서 현지 주도 발전(locally-led development)을 지지하는 공여국 성명을 발표하였고, 2023년 한 해 동안 국제기구, 국내 공여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현지 주도 발전’, ‘현장화’를 실현할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확산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코로나19를 거치며 현지 NGO나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고, 인도적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현지 맥락을 잘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고자 현장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파리선언 이후 강조된 ‘수원국의 주인 의식(ownership)’을 넘어서서 수원국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국제사회가 합의하게 된 것도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분권화, 현장사무소 역할 증대, 외교공관을 중심으로 하는 ODA 협의체 활성화 논의 등이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개발NGO와 개발협력 시행기관들은 현지 인력과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현지 주도 발전과 현장화에 대한 논의를 ‘실현’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3년 대한민국은 OECD/DAC 가입 이후 3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를 받았다. 그 결과는 내년에 공개되겠지만, 동료검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가 이심전심 고민한 것이 하나 있다. 이제는 신흥공여국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중견 공여국으로서 위상을 보여 줘야 한다는 점이다. ODA 예산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ODA 관련 제도, 집행절차 등 구조적 측면과 아울러 개발협력 생태계 내 모든 이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가 되려면 개발협력 분야도 계속해서 진화해야 하며 2024년에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

##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권 울  
ykwon@kiep.go.kr

### ● 글로벌 복합위기와 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자국 중심주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취약성 심화로 개도국의 성장기반과 경제·사회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2024년에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정책 공조와 협력기반 확충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과거 글로벌 위기가 금융·통화와 거시경제에 한정되었다면 최근의 위기는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보건과 환경에서 오는 복합된 위기라고 할 수 있고, 세계경제는 동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나, 국제적 긴장과 불충분한 협력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는 인플레이션, 국가 간 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국제개발 여건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안보와 같이 일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당면 도전과제로 제기되어 있다. 한편 개도국의 성장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자금지원

같은 ODA 공여만으로는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개발협력의 초점은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생활 수준 향상, 빈곤 감소, 성장과 개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제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왔으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직면한 핵심 문제는 분쟁과 난민, 기후 변화, 전염병,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세계적인 도전을 전통적인 개발 모델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공여국과 수원국,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민간 부문, 국제기구와 MDBs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 파트너십을 통한 위기에 대한 공조 없이는 의미 있는 개발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대되면서 정치, 경제, 외교·안보, 기술을 포함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불러오고, 국제사회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적응하려면 전통적인 경제 개발 패러다임에 통합하려는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개발협력과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양립시키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 세계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후위기 대응, 난민 지원, 코로나 백신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도록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ODA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의 개발협력을 벗어나는 것으로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ODA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ODA 지출이 확대될 경우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전통적인 개념의 개발협력과 초 국경적 글로벌 공공재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이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므로 개별국가에 대한 지원보다 ODA가 글로벌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대비 ODA 규모를 2030년까지 0.3% 수준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2019년 0.16%, 3.2조 원). 국제사회의 SDGs 이행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6.4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ODA의 전략적 활용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즉, 글로벌 복합위기에도 불구하고 ODA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전략적 운용을 위해 양허성 차관과 정책금융을 연계한 민관협력(PPP), 혼합신용을 통해 인프라, 기후변화 관련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24년 ODA 요구액 규모를 6조 8,421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원조예산 확대로 총 47개 기관 1,978개 사업을 계획 중이다. 따라서 내년도 ODA 규모는 2023년 4조 7,771억 원 대비 2조 650억 원 증가하여 요구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2%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 ●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전략적 운용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10) 이후 정부는 ODA 예산의 확대와 함께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왔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ODA 통합과 조정을 강화해 왔으나, 부처별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높고 사업 조정 및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분절화된 ODA 사업 추진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 미흡, 수원국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취약해지고 있는바, ODA와 개발금융 등이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수원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면 더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보편가치(international value)와 국가적 이해관계(national interest)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관점이 중요하다. 정부는 최근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GNI

## ● 개발자원 다양화와 민간참여 확대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전망에 따라 ODA 자원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민간 협력사업 발굴 등 자원조달 및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신흥국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려면 민간자본과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통해 대형·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원방식에서 전통적인 양허성 차관과 수익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성 차관, 보증 지원,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공공재 중요성이 확대되고 ODA 재원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재원과 정부재정을 적절히 조합하여 위험에 따라 상업금융 지원이 어려운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전통적 ODA로는 공여국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등 정책적 목적하에 개도국 사업의 위험을 정부 지원으로 커버하여 상업금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



하는 방식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개발금융으로 시장에서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개도국 민간 부문에 직접 지원을 확대하여 공적 지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발금융을 확대하려면 자원조달 및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발굴 및 선정, 금융지원 등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국제개발금융공사(가칭)와 같은 개발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은 시장재원을 이용한 금융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금융 기관(DFI)을 설립하고, 채권발행 등을 활용해 개발협력을 하고자 민간시장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방식은 전통적인 양허성 차관과 비상업차관, 보증지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기후변화와 개도국 녹색전환 지원 강화

개도국의 녹색전환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 분야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28.1%)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선도하고자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하여 프로그램 차관(Budget Support), 정책 컨설팅 등을 활용해야 한다.

ODA의 효과성 제고와 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면 우선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농업,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 ICT를 활용하여 수자원 관리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미래 유망분야 ODA 사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

또한 그린뉴딜 분야를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중점협력 분야에 적극 반영하는 등 그린뉴딜 ODA 협력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PPP) 등 다양한 자원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전환(green transition)을 위해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을 민간에서 동원해야 한다. 글로벌 선도국로서 한국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전략적 대외정책 수립과 개발금융 확대가 시급하다. 따라서 그동안 고양허성 차관 중심의 개발협력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크므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민간지원수단(PSI)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재원의 원천과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방식을 구분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양허성 차관을 적극 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양허성 차관 혁신 및 정부재원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

##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방호경**  
hkbang@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정책연구팀 연구원 **이소희**  
sohee@kdi.re.kr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첫 번째 목표는 빈곤 퇴치이다. 이 목표는 세계적으로 빈곤을 종식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 목적도 수원국의 빈곤 완화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자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서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협력은 기술원조, 지식공유, 역량구축, 역량개발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OECD는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증대하고자 기획된 모든 활동”으로서 기술협력의 요소를 (1) 장학, 교육·훈련 사업과 같은 교육 지원, (2) 전문가, 교사,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 파견, (3) 개발 관련 연구로 구분한다.

그러면 이러한 기술협력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상대국의 지속 가능한 자립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인구 증가율, 저축률, 자원의 활용과 기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 신고전학파는 기술진보를 외생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대신 내생변수인 자본축적을 경제성

장의 주요 원인으로 바라본다. 반면,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기술변화 및 인적 자본을 내생변수로 간주하여 혁신 노력에 주목한다. 혁신은 축적된 R&D 노력에서 비롯되는 지식에 의해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축적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 국가의 생산성 수준은 축적된 R&D와 지식스톡에 의존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실제 국내의 축적된 R&D가 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실증적 증거는 여러 연구에 제시되고 있다.

국가 간에 무역, 투자, 정보교류 및 지식공유가 이루어지는 세계에서는 한 국가의 생산성 수준은 국가 내의 자체적인 R&D 등과 같은 지식축적 이외에도 상대국의 축적된 R&D와 지식스톡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한 국가의 지식은 상품에 체화된 기술, 교육, 연수, 공동연구, 콘퍼런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 간에 확산 또는 파급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암묵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면을 통한 상호작용과 정보교환을 지적하며, 이는 실증적으로도 지지받는다(Catalini, 2018; Kerr and Kominers, 2015; Cowgill et al., 2009). 빈번한 상호작용은 정서적 친밀감(emotional closeness)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Granovetter,

1973), 이 모든 것이 지식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sup>1)</sup>

이러한 배경하에 OECD DAC 회원국들도 기술협력을 통한 지식확산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OECD DAC CRS 코드에 따르면, 기술협력 ODA는 크게 전문가 및 기술원조(D 항목)와 공여국 내 장학금 및 연수생 비용 지원(E 항목)으로 나뉜다(〈표 1〉).<sup>2)</sup> 최근 10년간(2012~2021년)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ODA를 보면 DAC 회원국, 비 DAC 공여국 및 다자기구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DAC 회원국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다. 공여국별로 보면 독일, 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증가세를 보였고, 프랑스와 미국 등은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 이후 기술협력 ODA의 위축은 주요 공여국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개발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데 기인한다(OECD, 2020).

특히, 기술협력 ODA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독일(GIZ)의 경우 단독 기술협력 사업이 주를 차지하긴 하나 무상 자금협력의 비율도 10~15% 정도 된다. 이는 단순 자금지원이 아닌 기술협력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정책 지원, 연수, 전문가 파견 등의 요소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최정애, 2020). 독일의 기술협력은 우리나라에 비해 큰 규모로 추진되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 단일 사업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진행하거나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특정 분야에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일본(JICA)은 기술협력 사업을 (1) 기술협력 (2) 기술협력 프로젝트 (3) 개발계획을 위한 기술협력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립 초기부터 중요하게<sup>3)</sup> 다루어 왔다(JICA, 2022). JICA의 대표 기술협력 사업으로 개도국의 현안 및 과제를 해결하고자 초청연수의 형태로 진행되는 지식공동창출 프로그램(Knowledge Co-Creation Program:KCCP)이 있으며 기술협력 프로젝트는 앞선 GIZ사업과 유사하게 여러 기술협력의 요소를 활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AFD 그룹<sup>4)</sup> 내 기술협력 ODA는 전담기관인 Expertise France뿐만 아니라 AFD에서도 수행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는 단독기술협력 사업이 대부분이나 후자는 자금협력(프로젝트 유형 원조사업) 내 기술협력 요소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사업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Expertise France는 재정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하는 것을 기관의 주요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00개 국가에서 500건 이상의 사업(약 3.08억 유로)을 추진하여 GIZ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주로 프랑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sup>5)</sup>

1 이 과정에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상대국의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 지식전달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OECD DAC의 기술협력 ODA 통계는 개별 사업으로 보고된 기술협력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프로젝트형 사업에 포함된 기술협력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ODA 프로젝트의 기획이나 이행과정 시 기술자문이나 연수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개발협력에서 기술협력은 실제보다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3 2020년 기준 기술협력 ODA 지원금액은 1,316억엔으로 전체 사업의 7.4%를 차지하는데, 124 기술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740건으로 무상원조 사업(155건)의 5배 가까이 됨(JICA 2022)

4 1941년 설립된 프랑스 개발청(AFD)은 공공부문과 NGO에 대한 ODA 자금지원, 개발협력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며 프랑스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주도하고 있음. 이외에도 개도국 민간협력을 담당하는 개발금융공사(Proparco)와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엑스퍼티스 프랑스(Expertise France)가 주요 ODA 시행기관인데, 이 3개 기관을 AFD 그룹으로 통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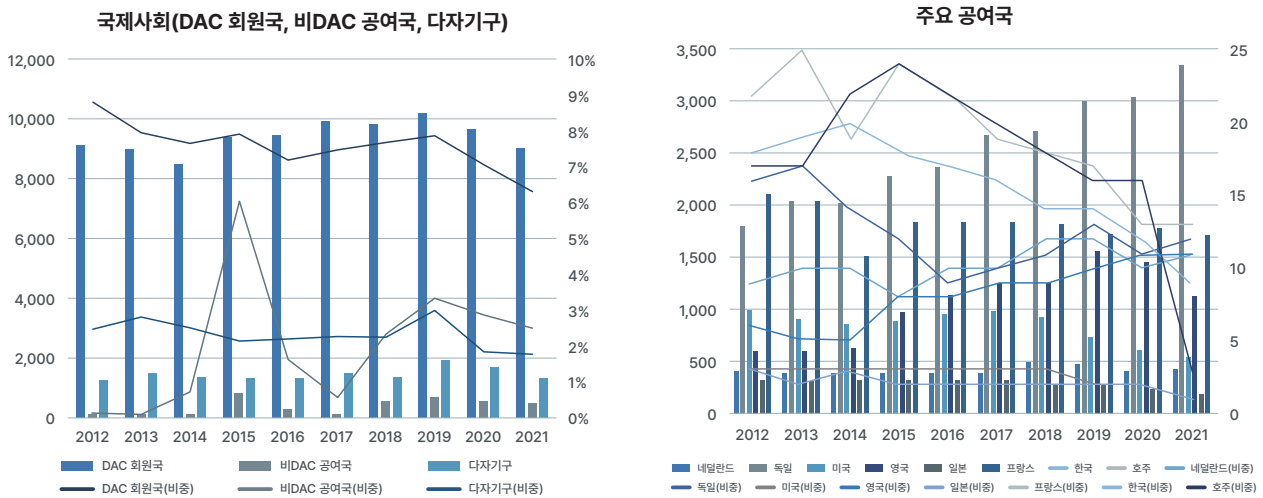
5 AFD 홈페이지(<https://www.afd.fr/en/actualites/expertise-france-joins-afd-group-allowing-holistic-approach-development>, 검색일: 2023. 11. 24.)

〈표 1〉 OECD DAC CRS 코드(협동 유형)

구분	정의
D	전문가 및 기술원조(Experts and other technical assistance)
D01	공여국 전문가 파견 (Donor country Personnel)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는 전문가, 컨설턴트, 교사, 학자, 연구자, 자원봉사자 및 부대 비용
D02	기타 기술원조 (Other technical assistance) 연수 및 연구, 언어 연수, 대학/기관 간 공동 연구, 현지 장학금, 개발과 연관된 사회·문화 프로그램 지원 세미나·워크숍, 교환방문, 출판 등도 포함
E	공여국 내 장학금 및 연수생 비용 지원(Scholarships and student costs in donor countries)
E01	공여국 내 장학금 및 연수 지원 (Scholarship/training in donor country) 학생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
E02	연수기관 간접비용(Imputed student costs) 공여국 내 간접비용

자료: OECD DAC and CRS code lists(202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2012~2021년 국제사회 및 주요 공여국 기술협력 ODA 지원 현황



주: 막대그래프: 지원금액(백만 달러), 꺾은선 그래프: 전체 ODA 대비 비율(%)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3.9.14.)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서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러 논의가 있지만 현재의 개발협력 환경으로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김은주, 2023).

자립적 성장의 기반 구축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자립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개발도상국이 지식과 혁신을 창출하고 활용 및 흡수할 수 있는 역량구축이 관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협력 ODA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기후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속 가능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요성에 맞게 기술협력 ODA를 더욱 적극 활용하고, 대상과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자립적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 **이요한**  
yhlee@b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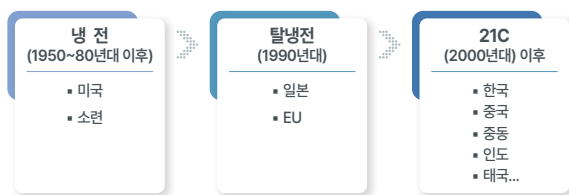
## ● 동남아 ODA의 역사

동남아는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국을 제외한 10개국은 모두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독립했으나, 곧 냉전 시대 (1950~1980년대)라는 냉엄한 국제질서에 직면하였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super power)의 신생 독립국을 자국 영향력으로 끌어들이려는 경쟁은 동남아 ODA의 시작점이 되었다. 미국은 태국, 필리핀 등 친미적 성향의 동남아 국가에, 소련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 공산세력에 대규모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시행했다.

하였다. 일본은 당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동남아 ODA를 크게 확대하였다. EU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동남아 국가와의 특수 관계를 복원할 수단으로 ODA를 활용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이념적·군사적 목적의 ODA가 중심이었던 반면 일본과 EU는 사회·경제적 목적에 중점을 두었다.

2000년대 이후 동남아 ODA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라는 또 다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전통적 ODA 구도는 선진국이 공여하고 개도국이 수원하는 형태였지만 남남협력은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 즉 한국, 중국, 인도, 중동 국가, 태국 등의 신흥국들이 동남아 ODA의 새로운 ODA 공여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림 1] 동남아 ODA 공여국의 전환



자료: 저자 작성

탈냉전 시대(1990년대)의 도래는 동남아 ODA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ODA의 핵심 공여국이었던 미국과 구소련의 역할이 감소한 반면 일본과 EU가 새로운 ODA 공여국으로 등장

## ● 동남아 ODA의 최근 동향

신생 독립 직후의 동남아 ODA는 주로 빈곤 탈피, 교육 및 보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동남아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ODA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는 여전히 ODA가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호주의 정책연구소인 로이 연구소





〈표 1〉 한국의 동남아 ODA

(단위: 백만 달러)

국가/연도	2018	2019	2020	2021	비율 (2021년 기준)
동티모르	6.36	9.44	8.96	12.48	9.05%
라오스	18.47	18.94	17.74	20.08	14.46%
말레이시아	0.14	0.20	0.18	0.21	0.00%
미얀마	20.93	22.46	18.63	4.38	3.15%
베트남	41.82	36.97	39.02	28.76	20.72%
인도네시아	9.01	10.97	15.15	24.71	17.80%
캄보디아	21.09	18.89	17.08	18.96	13.69%
태국	3.31	3.63	2.79	1.47	0.01%
필리핀	26.45	21.34	20.71	27.74	19.99%
합계	147.58	142.84	140.26	138.79	100%

자료: KOICA 오픈데이터 포털

한국의 동남아 ODA 총액은 1억 3,879만 달러(2021년 기준)로 2019년 1억 4,758만 달러 규모를 기록한 이래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ODA 지원액 감소는 2021년 2월 쿠데타 발생으로 급격하게 ODA 지원액을 줄인 미얀마 요인과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른 원조 규모 감소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증액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한국의 동남아 ODA 중점 분야를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운송 및 창고, 식수 공급 및 위생, 보건 분야가 공통 지원 분야로 꼽히고 있다.

〈표 2〉 한국의 동남아 ODA 국가별 지원 분야(2022년, 총지출액 기준)

수혜국	주요 지원(순위) 분야
캄보디아	운송 및 창고, 식수공급 및 위생, 보건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건설, 제조업
라오스	식수공급 및 위생, 보건, 에너지
말레이시아	교육, 농업, 보건
미얀마	운송 및 창고, 에너지, 교육
필리핀	농업, 운송 및 창고, 식수공급 및 위생
태국	교육,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제조업
베트남	운송 및 창고, 다부문, 식수공급 및 위생
공통 주요 분야	운송 및 창고, 식수공급 및 위생, 보건

자료: ODA Korea  
참고: 브루나이, 싱가포르 자료 없음

한국의 동남아 ODA는 규모나 경험, 체계 등에서 선진 공여국과 대등하거나 이미 앞선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한국의 동남아 ODA의 발전에 기여하려면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은 동남아(또는 아세안)를 포괄하는 ‘한-동남아(또는) 아세안 개발협력 중장기 전략(2025~2030 또는 2025~2035), 가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또는 연간 단위 차원에서 산발적 프로젝트가 수행됨으로써 단기적·일시적인 효과로 그치고 있는데 ODA 사업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아세안을 포괄하는 거시적·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전략은 UN SDGs와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 동남아 국별 개발계획(development plan)의 공유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만의 비교우위와 차별화된 분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여국인 한국에는 물론 수원국인 동남아 국가에도 일관되고 안정된 ODA 실행의 발판이 될 것이다.

둘째, 2020년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팬데믹과 기후 위기, 재생 에너지 등을 한국의 동남아 ODA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ODA는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경향성이 있지만 팬데믹, 기후위기, 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ODA 분야는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에게 절박한 분야로 공통적이고 상호협력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위기와 관련한 ODA는 13%(2021년 기준)에 불과해 일본의 44%, 중국의 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 ODA는 기존의 동남아 ODA 분야를 소홀히 하지 않는 동시에 글로벌 ODA 수요의 경향성에 발맞춘 신규 ODA 분야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

##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한국의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교수 김은경  
liprib612@gmail.com

### ● 글로벌 복합위기와 아프리카 ODA 현황

코로나19의 발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복합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총 ODA는 2021년에 비해 13.6% 증가했다.<sup>1)</sup> 2020년 이후 아프리카에서도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의 증가, 식량 위기 등으로 인해 빈곤이 증대하고 있으며, 2023년 발발한 수단, 니제르, 가봉에서의 쿠데타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ODA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림 1>의 실선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공여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한 전체 공적개발원조이다.<sup>2)</sup> <그림 1>에서와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202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ODA는 6.9% 감소했다.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2021~2022년에도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양자 원조도 7.8%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다.

특히, 다수의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이 속한 아프리카는 다른 수원국이나 수원 지역보다 ODA가 GDP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여 ODA는 자금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대아프리카 ODA는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는 그 수치가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반면, <그림 1>의 점선과 같이 2010년 이후 실질국민총소득(GNI) 대비 ODA는 평균적으로 2000년대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정부 수입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 해외에서의 송금 및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감소하고 있다.<sup>3)</sup> 이는 각국 정부가 보건, 교육 등 복지 부문에 자금을 조달 및 지원할 수 있는 빈곤 대응 능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극빈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이지리아는 2022년 정부 지출의 96.3%를 부채 상환에 투입함으로써 빈곤 해소에 기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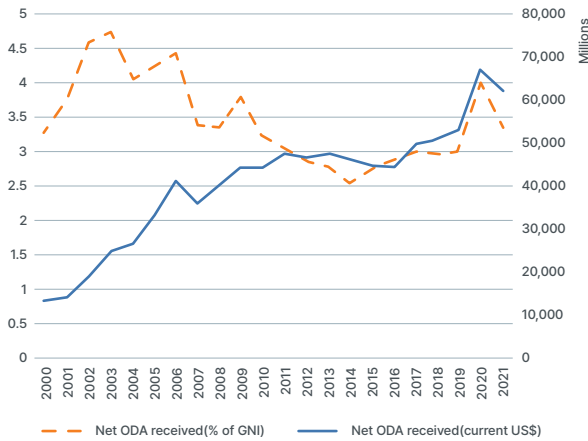
1 "ODA Levels in 2022 - preliminary data" OECD 12 April 2023.

2 양자, 다자, 기타 원조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이다.

3 UNCTA(2022) World Investment Report: Regional trends Africa.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그림 1] 대(對)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총 공적개발원조, 2000~2021년



자료 출처: 세계은행 데이터(https://data.worldbank.org/), 저자 작성  
참조: 실선은 우측의 총 ODA(단위: 백만 달러), 점선은 좌측의 GNI 대비 ODA

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그러나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 부문 원조(전반적인 아프리카 ODA 흐름과 유사하게)는 2020년 142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21년 15% 감소함으로써 식량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저소득 국가의 국가 부채 부담이 가중되었다.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금리 인상은 미국 달러 기반의 부채 상환을 더 어렵게 했다. 게다가 중국 등 비전통 공여국 부채를 가진 국가는 ‘부채의 덩어리’에 빠지게 됐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양자 원조국이다. 아프리카의 9개국 중 8개국은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의 17%는 중국의 지원을 받았다.<sup>7)</sup>

### 개발협력 부문별 ODA의 중요성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특히 에너지 및 식량 부문에 많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프리카의 에너지 취약국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sup>4)</sup> 식량 부문에서는 북아프리카가 큰 타격을 입었다. 2016~2020년 우크라이나 밀 수출의 27%를 수입했던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등은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식량 부족은 특히 저개발 국가와 기후변화 취약 국가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밀 수입의 87%를 러시아에 의존하던 콩고 민주공화국이 대표적인 예이다.<sup>5)</sup> 식량안보 증진의 핵심인 비료 무역도 영향을 받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주요 비료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의 비료 소비는 2022

한편, DAC의 ODA 양자 원조 대출은 2018년 기준 아프리카 파트너 국가 총 외부 부채의 4.1%만을 차지한다. 양자 채권의 평균 이자율은 2018년 1.3%에서 2021년 1.1%로 더 낮아졌고 평균 만기는 24.7년에서 21.1년으로 낮아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최빈국(LDC)에 대한 ODA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채권국과 대출 조건은 다양해지고 있다.<sup>8)</sup> 이에 따라 ODA 대출은 최빈국 외에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부채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DAC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2022년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사하라 이남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ODA와 기타 개발 금융 원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수입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ODA는 공공 재정 관리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

4 IEA(2022), Key findings - Africa Energy Outlook 2022.  
5 FSIN and Global Network on Food Crises(2023),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6 IFPRI(2023), The Russia-Ukraine war after a year: Impacts on fertilizer production, prices, and trade flows.  
7 OECD(2023),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3.  
8 OECD(2023), Monitoring ODA grant equivalents.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용·비즈니스 1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기타 항목에는 교통 인프라 구축, 재난 대비 지원 등이 있다.

## ●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정책의 특징 및 함의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ODA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ODA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2020년도 지원 규모는 455.64(백만 달러)에 머물렀다. 2020년 ODA가 2021년에 이월 집행되어 전년 대비 대아프리카 ODA 실적이 23.6%(563.10백만 달러) 증가했으나 2022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지원된 것으로 추정된다(563.3백만 달러). 2022년 DAC 고시 환율이 전년 대비 12.8% 증가하며 ODA 실적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화 지원 규모는 사실상 증가했다.<sup>9)</sup> 2023년 총 ODA 실적이 2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아프리카 ODA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563.3백만 달러 중 가장 큰 규모인 430.43백만 달러(76.4%)가 프로젝트 지원에 투입되었으며, 그다음으로 44.4백만 달러(7.9%)는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지원에 투입되었다. 분야별 ODA 프로젝트 지원은 총 459건 중 농·어·축산업 및 식량 109건, 의료·보건·위생 83건, 교육·직업 훈련 68건, 정책·행정 및 거버넌스 41건, 교통·통신·정보 37건, 에너지·환경 24건, 무역·금

〈표 1〉 2022년 한국의 대아프리카 ODA 분야별 프로젝트 지원

지원 분야	건수	지원 분야	건수
농어축산업 및 식량	109	교통/통신/정보	37
의료/보건/위생	83	에너지/환경	24
교육 및 직업 훈련*	68	무역/금융/비즈니스	10
정책/행정 및 거버넌스	41	기타	90
총		459	

\*자료 출처: ODA 통계(<https://stats.odakorea.go.kr/>). 저자 작성

\*각 분야 직업 훈련은 중복되어 기재됨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ODA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으며 농업 및 식량, 의료, 교육 등 핵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 측면에서 위의 결정이 전략적 선택인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CTAD) 아프리카 지부장 폴 아키우미(Paul Akiwumi)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ODA를 통해 산업 다각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10)</sup> 즉, 장기적 관점에서 보건·교육에 대한 투자를 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적인 산업 분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ODA의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ODA를 외교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일방적인 지원 대신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수요를 파악·분석해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9 외교부 보도자료, "22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27.9억 달러 지원," 2023/04/13.

10 UNCTD(2020), "Africa should u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diversify economies," *Africa Renewal*.

#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계명대학교 국제사업센터장,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정상희**  
sangjung@km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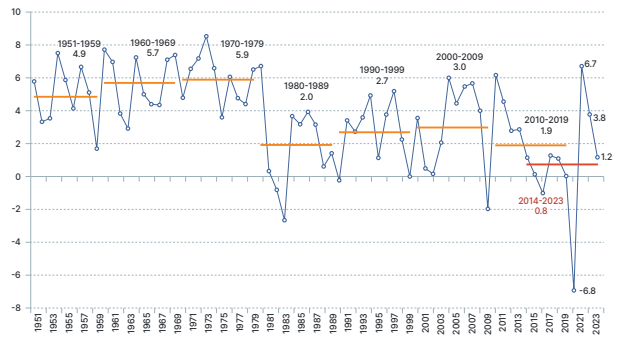
## ●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성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중소득국(Middle Income Countries, MICs)의 대륙으로 불리는 중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인 공여국들의 지원이 감소했던 지역이었다. 또한 멕시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수원국이나 동시에 신흥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중남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미국의 공산품 소비재 시장과 관련된 멕시코와 중미 국가, 석유, 광물, 식량의 수출 경제와 관련된 남미 국가, 관광산업과 연관된 카리브 국가의 경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 중남미 지역의 GDP성장률은 -6.8%를 보이면서 고용, 빈곤, 불평등과 같은 주요한 사회 분야 지표가 역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남미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으로 불리던 1980~1989년 GDP성장률은 2%였으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0.8%를 보였다.<sup>1)</sup> 이처럼 중남미는 코로나19 이전 중소득국의 지역으로 공여국 지원이 감소하고 신흥 공여국으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늘어났으나, 코로나19 이후 공여국들의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그림 1] 중남미 GDP성장률(1951-2023)



출처: ECLAC(2023)

## ●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SDGs 달성 현황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

1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2023), *Halfway to 2030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rogress and recommendations for acceleration*, Santiago, p.14.

2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2023), *Halfway to 2030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rogress and recommendations for acceleration*, Santiago, p.9.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력 체제의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종료되기까지 7년이 남았다. 그러나 2014년 이후부터 지속해 온 중남미 지역의 저성장 기조, 코로나19의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난민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2030년까지 SDGs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에 의하면,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목표 중 약 25%만이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나머지 27%는 오히려 역행할 수 있고, 48%는 속도가 느리지만 목표 달성을 하고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망한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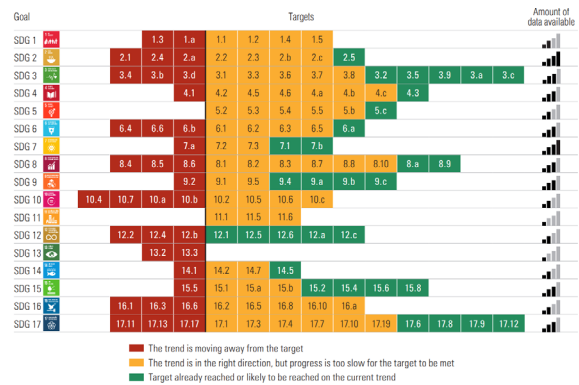
각각의 목표별로 언급한다면, 목표 3(건강과 복리), 목표 7(저렴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목표 9(산업증진과 혁신),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목표 14(바다, 해양자원의 보호), 목표 17(이행수단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은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의 정도가 양호하다.<sup>3)</sup>

그러나 목표 5(양성평등), 목표 6(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 목표 10(불평등 완화)에서 15%의 지표만이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목표 6(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 목표 10(불평등 완화), 목표 12(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목표 13(기후 행동)과 관련된 40% 이상의 지표는 2015년 시작점과 비교할 때 역행하는 추세를 보인다.<sup>4)</sup>

다만, 현재까지 관련된 지표의 데이터가 부족하며, 이를 측정할 기술적인 역량이 미비하다. 따라서 SDGs의 달성 상황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자 정보나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DGs 각각의 목표별 진전 상황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SDGs의 목표 간 연계성을 고려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2023년까지 SDG목표별 달성가능성



출처: ECLAC(2023)

●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전망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새롭게 논의되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은 모든 영역의 생산과 소비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생산성의 증대뿐 아니라 불평등하고 파편화된 교육과 보건, 정부의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세대,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둘째,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리튬, 전기 이동성,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릴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3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2023), *Halfway to 2030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rogress and recommendations for acceleration*, Santiago, p.82.

4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2023), *Halfway to 2030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rogress and recommendations for acceleration*, Santiago, p.81.

셋째, 코로나19 이후 계층, 지역, 연령, 성에 따른 격차와 불평 등이 심화하고 있다. 2019년 이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중남미의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통해 만성적인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었다. 따라서 중남미에서 농촌지역 주민, 원주민, 이민자, 여성, 노년층 등의 취약 계층을 포괄하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보편적 성격의 사회안전망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노동자 중 절반에 달하는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 수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기술혁신에 기반해 경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전통적이며 수직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과 인식에 따른 젠더 불평등 상황과 여성의 역량 강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봉쇄정책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폭력이 증가했으며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감소하여 경제적인 자주권이 약화하였다. 따라서 젠더 불평등 상황과 여성의 경제적인 역할을 개선할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섯째, 도시화 비율이 80% 이상인 중남미 지역에서 도시 지역은 사회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도시 내 취약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도시 내 슬럼가와 취약 계층을 위한 도시개발과 기초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은 단순한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개발협력'이라는 제한된 의미에서 '국제협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협력은 다양한 행위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조정하는 다자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언어, 역사, 정치, 경제, 사회구조에서 공통성을 가진 중남미에서 개도국과 개도국뿐 아니라 개도국, 중소득국, 선진국 간의 협력인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sup>5)</sup>과 삼각협력(Triangle Cooperation)<sup>6)</sup>이 확대되고 있다. SDGs체제에서 강조하는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은 기존의 선진국(공여국)과 개도국(수원국) 간 이루어졌던 수직적인 구도의 전통적인 지원과는 다른 새로운 지원유형이며, 이는 기존 선진공여국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체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최근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는 공적인 행위 주체뿐 아니라 비정부기구, 기업, 학계와 같은 다양한 민간의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차원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통해 다양한 민간의 개발 재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지식의 공유나 수원국의 역량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남미 지역은 국제개발협력 체제에서 새로운 지원유형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개선하며 다양한 개발 재원을 동원하고 다자차원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목된다. ▣

5 개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6 중소득국이 행위 주체로 포함되는 협력의 유형이다.

7 참고문헌: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ECLAC)(2023), Halfway to 2030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rogress and recommendations for acceleration, Santiago, 2023.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아시아중아팀 전문위원 김은지  
eunjikim@kotra.or.kr

최근의 국제사회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였다. 기후재난과 감염병, 전쟁과 국제질서 갈등 심화,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단절, 불평등과 사회 갈등의 심각화 등 여러 가지 중대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는 개도국이 직면한 에너지·식량·채무·인도적 위기 등으로 파급되어 개발협력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심화시켰다. 그 결과 기존의 개발협력 방식으로는 개도국의 복합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2023년 6월 개도국의 위기를 해결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고자 ODA 목표와 새로운 추진방식을 규정한 '개발협력대강'을 발표하였다. 일본 개발협력의 목표와 추진체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본은 개발협력을 목적으로 '국익 실현 공헌'을 공식화하며, 국익을 실현할 외교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개발협력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개발협력의 기본방침으로 '개도국과 대화와 협동을 통해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환류시켜 일본의

과제해결과 경제성장에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sup> 이와 같이 일본은 국익 실현과 개발협력의 연계를 공식화하면서, 향후 개발협력 추진 과정에서도 국익 실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전망이다.

일본은 개도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개발협력 사업추진 체계를 3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정비하였다. 첫째, 복잡한 개도국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조 체계로 대응력을 높였다. 다양한 주체(민간기업, 공적금융기관, 국제기구, 공여국가, 시민사회, 대학·연구기관 등)가 참여하는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금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이 ODA 협력 파트너로 참여함으로써 개도국의 개발과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임팩트 투자, 사회 책임투자 등 민간 투자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ODA 체제를 정비하였다.<sup>2)</sup>

둘째, 일본의 강점을 활용한 '제안형 ODA'를 도입하여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일본의 ODA 사업 추진방식은 개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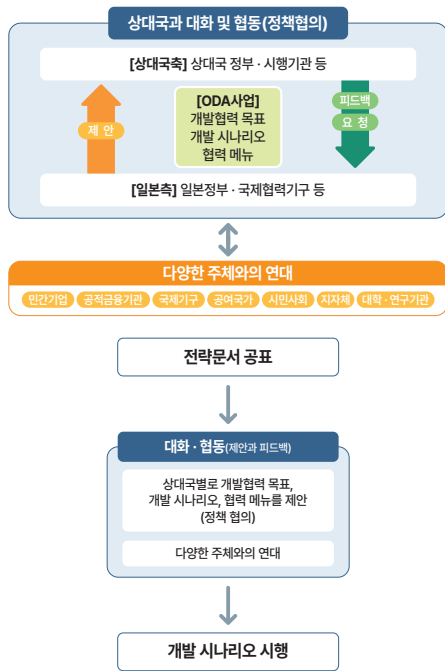
1 金子七絵(2023.9), 「開発協力大綱のあゆみと2023の改正一」

2 日本外務省(2023.6.9.), 「開発協力大綱」

개발협력  
지식공유  
동향 분석

의 요청을 받아 지원하는 '요청형 ODA'를 유지해 왔으나, 일본의 강점을 가진 지원 내용을 제안하는 '제안형 ODA'를 처음 도입하였다.

[그림 1] 일본의 '제안형 ODA' 추진방식



자료: 日本外務省(2023.6), 「オファー型協力について」

제안형 ODA 추진방식을 보면, 일본 정부가 개도국별 정책 협의를 통해 ODA 목표와 이를 실현할 개발 시나리오와 지원정책 메뉴를 제안하고, 개도국 수요에 맞는 협력 방향을 확인하여 ODA 안건을 형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제안형 ODA 분야로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촉진, 공급망 구축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sup>3)</sup> 일본은 자국의 강점인 높은 기술력을 개도국에 전수하고자 유학생·연수생 수용 및 전문가 파견과 같은 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ODA를 지원하고자 사업 추진방식에서 유연성·신속성을 제고하였다. ODA 지원이 원조국과 피원

조국이라는 종래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가운데, 유연한 ODA 지원방식이 요구되었다.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ODA 유상자금(엔 차관)만 허용되고, 무상자금을 제공하려면 긴급성과 신속성이라는 제약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긴급수요에 맞춰 무상자금과 기술협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통상 3년이 소요되는 ODA 심사 기간을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1년 반으로 단축하여 신속성을 제고하였다.<sup>4)</sup>

한편, 일본은 2023년 4월 5일 ODA와 다른 정부안전 보장능력강화지원(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이라는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sup>5)</sup> OSA는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ODA와 별도로 협력국의 안전보장능력, 역지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자금협력 지원방식을 말한다. 동 제도를 통해 종래 ODA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웠던 군이 사용하는 기자재(경계 감시용 레이더, 통신위성 시스템 등)를 제공하거나 인프라 정비도 가능해졌다. 일본은 OSA라는 새로운 제도를 토대로 더욱 유연하게 지원대상국의 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 개발협력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국익을 높이는 개발협력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통합적인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복합적인 개도국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개도국과 협의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조정하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새로운 개발협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의 OSA와 같은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거나 심의절차를 개선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日本外務省(2023.9.), 「オファー型協力を通じて戦略的に取組む分野と協力の進め方」  
4 日本外務省(2023.3.14.), 「2022年版 開発協力白書」  
5 鈴木拓海(2023.7.28.), 「外交・安全保障第12回: 政府安全保障能力強化支援(OSA)とは何か」



##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실 정책자문1팀 연구원 **윤근영**  
yoony3429@kdi.re.kr

“투자를 위해 많은 기업이 특구에 방문하여 시찰하지만 막상 전력 부족 문제로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 수도 등 기초 인프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페루 Matarani 경제특구 관계자 Marco Castro씨)

“현재 페루 경제특구 활성화와 FDI를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지속가능성’입니다.” (페루 통상관광부 실무자 Valeria Lezcan Bartra)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이른바 SEZ는 국가 경제성장 등을 목적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차별적 규제 및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자유지역 등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자유치를 하고자 외국인 투자지역(1998), 자유무역지역(2000), 경제자유구역(2003) 등 다양한 경제특구를 운영해 왔다. 한편 페루의 경우 광물자원 부국으로서 중남미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원자재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녀 글로벌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피하는 페루 통상관광부의 수요를 바탕으로, 2022/2023년 페루 KSP 사업은 ‘페루 경제특구의 FDI 유치를 하고자 로드맵 수립’을 주제로 추진되었다.

KSP 사업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 공유 사업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모든 협력국에 적용 가능한 모범답안이 될 수는 없다. 협력국이 처한 환경은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당시의 환경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한국이 경험한 모든 경험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경제특구 선정 및 관리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동 사업은 대주제명에 걸맞게 페루의 경제특구 발전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한국이 경험한 시행착오까지 공유하고자 하였다. 즉, 개발 초기에는 기초 인프라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입지 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옴부즈만 제도 등을 활용하여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입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2022/23 페루 KSP 사업을 통해 제시된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 단기과제: 입지 여건 개선(기초 인프라와 인센티브 제도 마련)

경제특구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업이 입주하기에 매력적인가, 즉 입지 여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입지 여건에는 ‘인프라 여건’과 ‘인센티브 여건’이 있는데, 기초 인프라 구축은 경제특구 활성화에서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ZofraTacna 경제특구에 입주한 벽돌 제조기업 Ladrillera Maxx S.A.C. 관계자는 실태 조사 인터뷰를 통해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철도나 컨테이너 시설 등 물류 인프라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하였다.

한편 경제특구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제도는 입지 여건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 페루 내 경제특구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이 유일하다. 이에 동 KSP 사업에서는 입주기업에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 이외에도 임대료 감면, 금융지원 인센티브 등이 존재함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현재 페루와 같이 개발 초기단계인 경우에는 투자 자원 조달 여건과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전방위적인 조세감면 인센티브가 유용한 한편, 개발 후반기에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금융 지원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ZofraTacna 경제특구 입주기업 Ladrillera Maxx S.A.C. 벽돌공장 시찰(2022.11.23)

## ● 중기과제: 앵커기업 유치와 옴부즈만 제도

단기과제로 기초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다면, 해당 경제특구에서 핵심 역할을 할 앵커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앵커기업은 특정 산업이나 경제 생태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규모 기업으로, 특구 내 앵커기업 유치는 다양한 기업의 연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구 활성화에 효과적인 전략이다. 즉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특정 산업에의 특화(specialization)에 성공한 경제특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페루 생산부(PRODUCE) Luis Antonio Garcias 정책국장은 세부 실태조사 인터뷰를 통해, 생산부 차원에서는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제조업의 고도화를 피력하였다. 페루의 경우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1·2차산업을 우선 특화한 다음, 점진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제조산업을 고도화하고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면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가질 수 있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주 여건 개선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동 KSP 사업에서는 관련 제도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하였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제도는 대통령이 직접 위촉한 단장으로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한국 내 다국적 기업이 제기한 고충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페루 ZofraTacna 경제특구 관계자 Melisa Samame는 KSP 연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페루 정부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이러한 고충을 처리, 개선한다면 추가 투자 유치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경제부, 생산부, 투자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 배석 라운드 테이블(2023.07.12.)

### 장기과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특구

페루는 2018년부터 OECD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022년 2월 OECD는 페루를 비롯한 6개 국가의 가입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페루 통상관광부는 동 KSP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부터 경제특구 내 제공되는 조세 관련 인센티브 제도가 OECD 권고사항 및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처럼 페루 경제특구를 활성화할 정책제언 제시에서 장기적인 미래 방향성까지 포괄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특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언하였다. 예컨대 페루가 우위를 점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페루 경제특구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경제특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실험의 장'으로서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 Roadmap of FDI Attraction Strategies for SEZs in Peru

페루의 경제특구는 협력 부처인 통상관광부뿐 아니라 페루 재정경제부, 생산부, 투자청, 리마 상공회의소, 수출협회 등 유관 부처 및 기관, 경제특구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동 KSP 사업의 경과가 통상관광부 장관관에 수시로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대내외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보고된 바, 주제의 중요성과 시의성, 관계자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드맵'은 특정 목표 또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따라야 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페루 경제특구가 활성화되어 FDI를 유치하기까지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발전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동 사업의 정책을 제언해 페루의 FDI 유치, 나아가 우리 기업의 페루 진출 및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



고위정책대화(2023.07.11.) 왼쪽부터 통상관광부 차관, 최희남 수석고문, 통상관광부 장관

##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방호경  
hkbang@kdi.re.kr

파리기후협정이 발효된 가운데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최근 신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여건하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자체적인 역량만으로 탈탄소 관련 기술 및 역량을 확보하는 데 더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탈탄소를 달성하려면 결국 무역, 개발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선진국들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탈탄소 관련 최근 논의 동향이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 둘째,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무역구조와 함께 대표적 무역저해요인인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현황 및 특징을 통해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무역원활화 논의에서 주는 시사점, 셋째,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에 대한 무역효과와 관세와 비관세조치 간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이다.

본 연구의 각 장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무역 측면에서의 탈탄소 이슈의 의의를 살펴보고, 또한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범위를 도출하였다. 파리기후

협정은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되었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대하는 노력으로서, 이는 중요한 개발협력 의제이자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역량 축적이 미비한 것을 고려할 때, 탈탄소 경제로 이행하려면 관련 품목의 국가 간 원활한 흐름이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그동안의 환경상품에 대한 원활화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크게 진전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에 대한 무역원활화는 적절한 지원 정책과 병행될 때 개도국의 기술적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역량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다자간 협상 타결이 어려운 가운데 일부 회원국 간에 우선해 무역 자유화를 이행하고 이를 확장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던 정보기술협정(ITA) 사례는 탈탄소 분야의 무역원활화 논의 전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전 세계 및 소득수준별 무역특징을 검토하고, 또한 해당 품목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였다.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전 세계 무역은 전체 품목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생산활동이 둔화한 시기에도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다만 고소득국과 중상위소득국이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저소득국과 저소득국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그동안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관세 수준은 전반적으로 인하되어 왔지만, 비관세조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은 고소득국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중상위소득국, 중하위소득국 및 저소득국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관세조치(TBT/SPS)는 관세와 정반대로 저소득국, 중하위소득국, 중상위소득국, 고소득국 순으로 높았다. 비관세조치는 주로 에너지 및 안전 관련 기술규제와 인증 및 표준 등이었고, 특정무역현안은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표준 및 라벨링 등과 관련되었다.

제4장에서는 탈탄소 관련 기술 품목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세와 비관세조치 간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관세는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수출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비관세조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수입규모의 경우 관세율이 낮고 비관세조치 건수가 적을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 추정결과는 소득수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관세의 수출단가에 대한 영향은 모든 소득수준별 국가군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비관세조치는 고소득국과 중상위소득국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가졌다. 이는 고소득국과 중상위소득국의 경우 비관세조치에 따른 높은 순응비용으로 인해 이들 국가로 수출되는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것을 시사한다. 수입규모의 경우 고소득국의 관세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비관세조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보였다. 반면, 중상위소득국, 중저소득국과 저소득국은 관세와 비관세조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소득국의 경우 관세보다 비관세조치가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수입 흐름에 더 중요한 요인이고, 중상위소득국, 중저소득국 및 저소득국에서는 관세와 비관세조치 모두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관세와 비관세조치 간 상반된 추세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세와 비관세조치 간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허세율과 실행세율 간 격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관세조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순응비용을 낮출 지원을 개발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정보기술협정(ITA) 사례와 기체결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통해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무역 원활화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아울러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순응비용을 낮출 지식공유사업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다자차원의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ITA의 추진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국제사회의 환경상품 무역원활화 논의에서 답보 상태를 보인 주요 요인이 ITA와 유사하고, WTO 회원국 중 일부만 ITA에 참여한 무역원활화 협정이었다라도 관세철폐의 효과가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었다.

둘째, WTO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다자간 협정으로 언급되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의 발효 국은 2023년 9월 기준 156개국에 달한다.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이 무역원활화 협정에 따른 편익과 이행을 지원하고자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지원 신탁기금(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TFAF)을 설립하였다. 본 연구는 TFAF를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역량강화와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의 순응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선진국 들



의 정책 및 기술적 노력과 함께 개발도상국으로의 탈탄소 기술이 전, 무역 활성화 및 역량강화 활동 등 지식공유사업이 중요하다.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 시장실패를 해결하려면 TBT 등 비관세 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구축 및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기술 자문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으

로 개발도상국의 무역 순응비용을 낮추고,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인 무역정책 및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제무역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탈탄소 기술 부문의 비관세 조치와 관련한 정책 및 기술자문의 주요 대상 분야로는 주요 제품의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등 자국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TBT 협정 준수 등 관련 대외정책 수립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표 1〉 기존 주요 환경상품 목록 비교

	OECD(1999)	WTO(2007)	OECD CLEG(2010)	APEC(2012)
목적	환경산업 범위 지정, 이에 대한 경제·정책 분석	조기 무역 자유화	OECD에서 기후변화 관련 상품에 대한 목록 예시 제시	조기 무역 자유화
현황	-	협상 중지	-	2012년 서명 5% 이하로 관세 감축
품목 수 (HS 기준)	164 (HS1996)	153 (HS2002)	165 (HS2007)	54 (HS2012)
품목별 비중 (%)	폐수처리(48), 대기오염 관리(17), 측정분석(12), 고품폐기물 관리(11), 재생가능 에너지(3), 기타(9)	폐수처리(20), 측정분석(20), 재생가능 에너지(18), 폐기물 관리(16), 기타(26)	재생 에너지(22), 청정·자원효율적 기술 및 제품(19), 환경모니터링·분석·평가도구(15), 열·에너지 관리(10), 고품유해폐기물 관리(10), 기타(24)	환경모니터링·분석·평가도구(30), 재생가능 에너지(30), 고품유해폐기물 관리(22), 대기오염 관리(9), 폐수처리(9)

자료: 방호경·나승권·이보람(2013), p. 16; OECD(2014), pp. 51-56.

〈표 2〉 IMF 및 WEF 탈탄소 관련 품목 정의

	IMF	WEF
논의 목적	저탄소 기술 제품(Low Carbon Technology Products) 무역통계 작성	기후 관련 품목(Climate Goods) 무역장벽 파악
HS 기준	HS 2017	HS 2022
품목 수	124개	186개
HS 코드별 품목 수	84류 41개, 85류 29개, 90류 23개, 25~76류 21개, 86류 1개, 87류 9개	28류 4개(HS 4단위 1개 포함), 29류 2개, 38류 1개, 39류 5개, 44류 6개(HS 4단위 품목), 45류 1개(HS 4단위 품목), 68류 3개, 70류 8개, 73류 12개, 75류 1개, 76류 3개, 84류 44개, 85류 52개, 86류 12개, 87류 8개(HS 4단위 1개 포함), 90류 19개, 94류 4개, 96류 1개
분류체계별 품목 비중	-	에너지 공급 69%(128개), 건물 11%(20개), 수송 15%(27개), 탄소포집 4%(8개), 냉매 관리 2%(3개)

자료: IMF, WEF.



## 2023년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

지난 11월 16일(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의 역할(Path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Foundation of Knowledge)’이라는 주제로 세계은행 산하 도쿄개발교육센터(World Bank Tokyo Development Learning Center, WB TDLC)와 함께 공동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글로벌 포럼을 통해 주요 연구과제와 협력사업 결과를 국내·외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기관 홍보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내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성과확산이 실시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행사는 최초로 국외에서 실시한 글로벌 포럼으

로 세계은행, 일본 정부 및 아시아 지역 주요 도시 관계자 약 80명에게 KD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수행한 다양한 정책연구 및 사업 결과를 공유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번 글로벌 포럼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제약요소 분석, 지식공유와 역량강화의 중요성, 스마트시티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한편, 다양한 국가와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향후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과제와 연구 방향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앞으로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글로벌 포럼을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 및 구축할 계획이다. ▾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0:00-10:30	개회식
10:30-11:00	개발도상국 발전제약요소 분석
11:00-12:00	스마트시티와 기후변화
13:00-14:00	지식공유와 역량강화
14:00-15:00	패널토론: 도시문제 해결과 지식의 역할



## 2023년 EIPP 세미나: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한 한-EU 혁신적 파트너십



2023년 11월 17일 KDI는 기획재정부 주최, 한국수출입은행, KOTRA, KIND와 공동 주관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한 한-EU 혁신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EIPP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EIPP 세미나는 중동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EIPP를 활용한 협력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스웨덴, 이탈리아 등 협력국 관계자와 한국의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과 중동부 유럽 주요국의 정책 경험과 현안을 공유하고 EIPP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배터리 산업,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그린 에너지,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 역내국과 한국 간의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특별 세션에서는 EU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의 전략과 EU 역내 국가와의 협력 전략을 모색하였다.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의 재건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수요 발표로 시작한 동 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서 나아가 혁신 경제로의 도약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 모델이 제시되었다.

2023년 EIPP 세미나에는 9개국 약 105명이 참여하여 EIPP 사업에 대한 중동부 유럽 지역 국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과 중동부 유럽지역 주요국 정상 간 협의한 협력 의제 지원, EIPP 인지도 제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EIPP 역할 제시, 향후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 EIPP 사업을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ㄱ



## 2023년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KDI 세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식공유와 국제개발협력



지난 12월 8일(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에 KDI 특별 세션을 마련하여 참여하였다. KDI 세션에서는 ①방글라데시의 디지털 금융과 여성 임파워먼트, ②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통합적 접근, ③중동부 유럽 국가 유형화 및 지식공유 협력 전략에 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실질적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2023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는 “회복을 넘어 미래로: 융합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총 27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공공

행정, ▲기후변화, ▲과학기술혁신, ▲보건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졌다. 이를 통해 학계·연구기관·유관 부처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 과제와 변화하는 정책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금번 동계학술대회를 통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 대회 참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센터 연구 확산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 일 자** 2023년 12월 8일(금)                      **주 최** 국제개발협력학회, 외교부
- 시 간** 09:00~19:00                              **주 관** 국제개발협력학회, 외교부, 한국행정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민건강보험
- 장 소** 송실대학교 \*온오프하이브리드        **후 원**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프로그램**

시간	내용	프로그램
16:20~16:25	사회	<b>인사말</b>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16:25~17:25	발표1	<b>디지털 금융과 여성임파워먼트-방글라데시의 초등 교육 보조금 모성 지원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b> 백진영(한국개발연구원)
	발표2	<b>국제개발협력 분야 에너지 전환과 SDGs</b> 우혜영, 이소희(한국개발연구원)
	발표3	<b>중동부 유럽 국가 유형화 및 지식공유 협력 전략</b> 권경덕(한국개발연구원), 이재광(한국공학대), 서종현(한국공학대학교)
17:25~17:50	토론	송지선(국립외교원), 한선이(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민협(한국개발연구원)

##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p>2023년 3호</p> 	<p><b>이슈톡</b> 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 김연규 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 정창구</p> <p><b>동향 분석</b> 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 이미연 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 오정은 </p> <p><b>KSP 포커스</b>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 이세훈 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 서규혁</p> <p><b>CID 연구포커스</b>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 이진이</p>
<p>2023년 2호</p> 	<p><b>이슈톡</b>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사후관리가 왜 중요한가? / 안충영  ESG 연계 개발협력과 민간기업의 참여 / 이준희 </p> <p><b>동향 분석</b> 기술협력사업의 PDM 활용 개선방안: 지식공유사업을 중심으로 / 강경재 보건의료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과 스마트 헬스케어 / 김준</p> <p><b>KSP 포커스</b> KSP 주제분류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 노보배 [우즈베키스탄 KSP+]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 한재현</p> <p><b>CID 연구포커스</b>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확대를 통한 국내의 청년의 글로벌 기회 확대 / 우혜영</p>
<p>2023년 1호</p> 	<p><b>이슈톡</b>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 임호열  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 성한경</p> <p><b>동향 분석</b>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 김은주  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 이재광  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 황금물결</p> <p><b>KSP 포커스</b>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 유성희</p> <p><b>CID 연구포커스</b>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 김대용, 이소희</p>
<p>2022년 3호</p> 	<p><b>이슈톡</b> 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 정성철  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 김성규 </p> <p><b>동향 분석</b> 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 홍문숙 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 김유나, 홍은선</p> <p><b>CID 연구포커스</b>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 김정욱, 윤지희 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방호경</p>
<p>2022년 2호</p> 	<p><b>이슈톡</b>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 윤석현</p> <p><b>동향 분석</b>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 김지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 황금물결 </p> <p><b>KSP, EIPP 포커스</b>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 김하아람</p> <p><b>CID 연구포커스</b>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 홍성창</p> <p><b>YKSP 스토리/CID 소식</b>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태연</p>
<p>2022년 1호</p> 	<p><b>이슈톡</b>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 장은혜</p> <p><b>동향 분석</b>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 김에림</p> <p><b>KSP 포커스</b>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 김지원,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송지은</p> <p><b>CID 연구포커스</b>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 우혜영</p>



##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 문 의** 이소희 연구원(044-550-4475, sohee@kdi.re.kr)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발 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발 행 인**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편 집 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위원

**| 편집위원**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 김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정책연구팀장

**| 편집간사** 이소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정책연구팀 연구원

**| 문 의** 044-550-4475,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